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긴장하는 지방의회들

항공권 위·변조 등 수사 본격화
경찰, 광주 3개 기초의회 압수수색
전남 지역도 15개 시·군의회 조사
예산 반납·국외 출장 취소 잇따라

광주·전남 지방의회가 국외 출장을 나가면서 출장비를 부풀려 예산을 과다 지출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광주에서만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으로 수십여명에 이르는 관련자들을 입건하고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속도를 높이면서 지방의회가 긴장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 사이에서는 하반기 연수를 앞두고 수사 압박이 조여들면서 올해 출장을 취소하는 등 몸을 사리는 모양새도 감지된다.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29일 광주시 동·서·광산구 의회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중 각 지방의회 사무국에 수사관을 보내 업무용 컴퓨터 등에 저장돼 있던 출장비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동·서·광산구 의회 직원들, 해외출장을 동행한 여행사 대표 등 10여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의 경우 광주시의회 시의원과 직원을 직접 입건하지는 않아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광주시의회 수사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 확대가 점쳐지고 있다.

전남경찰청도 전남도의회, 15개 시·군 의회 의원들과 직원, 여행사 대표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 입건할 방침이다.

광주시 남·북구의회와 전남 7개 시·군의회는 권익위에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아직까지 지방의회 의원을 입건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망이 좁혀 오자 광주·전남 각 지방의회에서는 올해 공무 국외 출장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광주시 동구의회는 지난 6월 “고물가·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 예산을 아끼자”면서 공무 국외 연수 예산 3000여만원을 반납했다.

고흥군의회도 지난달 25일 폭염과 수해, 지역경제 위축 상황을 고려한다며 올해 공무 국외 출장 예산 9000여만원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수시의회는 최근 사전 출장 검토제, 주민 의견수렴 및 위원회의결 등 강화된 연수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로 올해 공무 국외출장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이에 광주·전남 시민들 사이에서는 각 지방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 수사 등으로 인해 여론이 더 악화되는 것을 피하려고 국외 출장을 줄줄이 취소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취소 사유로 민생 회복, 자연재난 대응 등을 앞세웠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234곳을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방의원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수사 의뢰를 한 데 따라 이번 사건 수사를 개시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기간 전국 지방의회에서 출장 915건에 예산 355억여원이 지출됐으며,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된 출장에 지방의원이 동행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1400여건에 400억여원이 지출된 점을 확인했다. 이 중 지방의원 출장 건 중 44.2% (405건)는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하도록 한 정황을 적발했다. 예산으로 입장료·가이드비 등 기타비용을 부정하게 지급하거나 출장자가 자기 출장을 ‘셀프심사’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를 남긴 사례, 결과보고서를 여행사에 대필해 줄 것을 맡기는 등 문제도 드러났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수사 무마 대가 수익 수수 변호사 2심도 3년형

금융권 대출비리 수사무마를 대가로 수익원을 수수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유진)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A(60)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은 2억 1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감액했다.

A변호사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광주의 한 저축은행의 241억원 상당 부실 대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대가로 총 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변호사는 7억원을 공범들과 분배한 뒤 2억 1000만여원을 챙겼다가, 전직 저축은행장 등이

구속되자 5억 7000만원을 반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변호사가 받아 챙긴 돈 중 임의로 소비했다고 인정하는 6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금 그대로 보관했다가 반환한 것인지, 쓰고 나서 현금을 마련해 반환한 것인지 판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실질적으로 이익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6000만원만 추징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수사 무마 청탁을 한 전직 저축은행장과 대출 브로커 등은 부실 대출에 관여하고 빚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배임 등)로 기소돼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ACC캐릭터 모꼬지 행사 신나요

2025 ACC캐릭터 모꼬지 행사가 지난 3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에서 열렸다.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시아(ACC 어린이문화원), 뽀로로(뽀롱뽀롱 뽀로로), 디디(마법소녀 디디), 뽀뽀이(뽀알뽀알뽀뽀이), 빛돌이(광주시청), 에피(광주2025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등 다양한 캐릭터 행진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양과동 SRF시설, 악취배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된다

6개월내 악취방지계획 제출해야
남구 행정예고...인근 주민 환영

광주시 남구 양과동 자연성폐기물연료화(SRF)시설이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된다.

그동안 해당 시설 인근 주민들이 3년여 동안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측정치가 기준을 수차례 넘어선 데(광주일보 8월 11일 6면) 따른 조치로, 주민들 요구를 수렴해 뒤늦게나마 행정 조치가 이뤄졌다.

광주시 남구는 지난 29일 “양과동 SRF 시설을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한다”고 행정예고했다. 남구는 오는 17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본격적인 지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현행 악취방지법(제 8조)은 악취 민원이 1년이상 지속되고 법정 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해당 시설을 ‘악취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해 관

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악취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되면 시·도지사 등이 해당 시설에 대해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된다.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시설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신고대상시설이 되면 지자체와 한국환경공단은 악취를 처리하기 위한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의 운영자에게 처리시설 운영을 맡기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SRF 시설로 악취 피해를 호소해 왔던 인근 주민들은 이번 행정 조치를 환영하는 한편, 만약 조기에 측정을 실시했다면 보다 신속히 ‘신고대상시설’ 지정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드러내고 있다.

행정당국은 그동안 “악취관리지역이 아니고 신고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치를 미뤘으면서도 지난해 단 한 건의 악취 배출 현황

측정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행정당국의 느슨한 대응으로 신고대상시설 지정이 늦어졌다는 것이 주민들 주장이다.

올해 보건환경연구원이 시행한 해당 시설 악취 채취 시료 분석 결과, 배출구와 부지경계에서의 복합악취 희석배수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횟수는 11번 측정 중 9차례나 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6월 12~13일(24시간 내 측정)과 지난 8월 6일, 7일, 15일, 19일, 20, 23일, 27일, 28일이다.

특히 지난 19일과 23일의 배출구 악취측정치는 기준치(희석배수 500)의 두 배인 1000이 나왔고, 지난 27일과 28일 악취측정치는 기준치 4배인 2080이 검출됐다.

신동의 효천지구주민대책위원회 대표는 “주민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몇년 간 제기해 왔던 문제가 이제서야 당연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아직 남아있는 악취관리구역 지정 등에 대해서도 빠르게 진척돼야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영암 공사현장 작업자 2명 토사에 하반신 매몰 부상

병원 이송...생명 지장 없어

영암의 공사현장에서 30대 작업자 2명이 무너진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영암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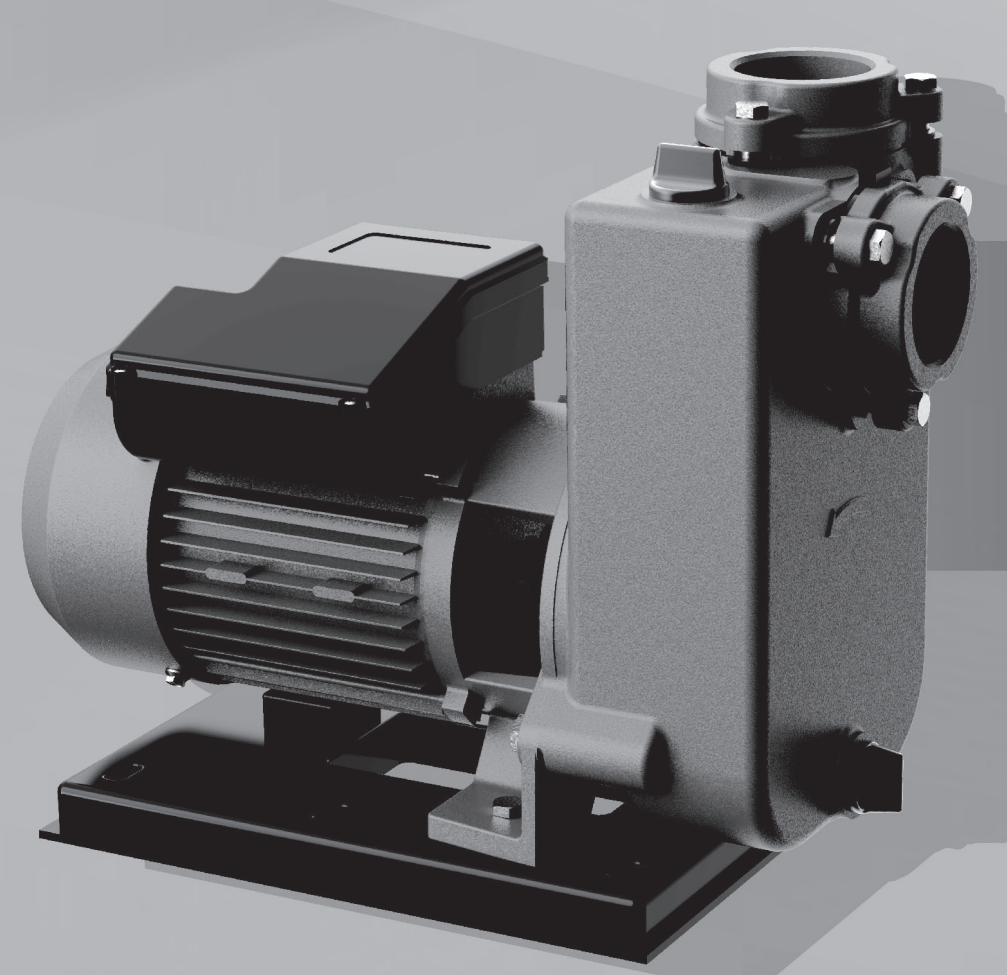
50분께 영암군 시종면 신흥리 월악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내려 30대 A씨 등 작업자 2명의 하반신이 매몰됐다.

A씨 등은 안면부 찰과상과 팔다리 통증 등 경상을 입어 각각 나주종합병원과 빛가람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이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여m 깊이에서 하수관로 정비 작업을 하던 중 관로 인근의 흙이 쏟아지면서 작업자들을 덮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곳에서는 영암군 영암수도사업부가 추진하는 하수도 관로 정비사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